

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전번호 제2022-016-133호  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 :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2. 9. 28.

#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 이 유

#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이며 온라인교육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이하 “보호법”이라 함) 제2조 제5호에 따른 ‘개인정보처리자’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**< 피심인의 일반현황 >**

대 표	사업자등록번호	설립일자	종업원 수	매출액('21년)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현장조사( )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1. 개인정보 유출 사실

#### 가. 유출 경위 및 규모

피심인은 온라인교육 참여자\*를 대상으로 한 경품이벤트 당첨자를 홈페이지(.co.kr)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당첨자( )가 아닌 전체 교육 참여자( )의 개인정보 파일(엑셀)을 첨부하였다.\*\*

\*

\*\* 비식별처리된 당첨자 명단만 게시하여야 하나, 전체 참여자의 식별정보를 게시

#### 나. 경과 및 대응

일 시	유출 인자·대응 내용
	담당자 실수로 홈페이지에 전체 교육참여자 파일을 게시
	홈페이지 해당 게시물이 잘못된 것을 인지, 해당 게시물 삭제
	개인정보 유출 신고
	유출 통지(이메일, 홈페이지 게시)

## 2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피심인은 홈페이지에 경품이벤트 당첨자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전체 참여자( )의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게시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\*되었다.

\*

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 III. 위법성 판단

## 1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<sup>(제2호)</sup>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고시 제2020-2호)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.

## IV. 처분 및 결정

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2]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피심인은 최근 3년간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
자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,200	2,400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 1. 일반기준 라.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#### 1. 일반기준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피해발생이 없고, 인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진 신고하였다. 또한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, 개인정보보호 인증(ISMS-P)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.

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%인 300만 원을 감경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	
위반 조항	처분 조항	기준금액 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D=(A+B-C)
제29조(안전조치의무)	제75조제2항제6호	600	-	300	300

※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 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2년 9월 28일

위 원 장      윤 종 인    (서 명)

부위원장      최 장 혁 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고 성 학 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백 대 용 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서 종 식 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염 흥 열 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이 희 정    (서 명)

위      원      지 성 우    (서 명)